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민생에 온기를,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-

2025. 1. 14.



해양수산부

순서

I. 정부 출범 이후 성과 및 평가	1
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4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3

I. 정부 출범 이후 성과 및 평가

1 주요 정책성과

□ 해운·항만 등 물류 재도약 기반 마련

- 세계 4위 해상수송력 확보*,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항만(부산항신항 7부두) 개장
* '24년,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의 규모(선복량) 1억톤 달성
- 중동사태 등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 적극 지원
* 임시선박 투입, 중소기업 전용 선박 제공

□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

- 적극적인 수산물 수급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 장비구니 부담 완화
* '24년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(전년대비) 1.6% (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.3%)
- 소규모 어가·어선원 직불금 지급 개시('23~), 소외도서 여객선 운항 지원('23~)

□ 해양수산업, 역동적 수출 산업으로 성장

-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30억불 돌파('22), '김' 수출 1.3조원 돌파('24)
- 해운서비스 수출액 50조원 달성('22),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 실적
- 해양플랜트 서비스 3년 간 약 8,500억원 해외 수주 달성
* 해양플랜트 서비스 해외수주 실적(억 원) : ('22) 907 → ('23) 1,839 → ('24) 5,770

2 개선 필요사항

□ 기후변화 영향 본격화 → 수산업 체질 개선 필요

- 여름철 고수온 피해 증가*, 어획량 감소 및 기후플레이션 본격화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체계 구축 필요
*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, '24년 고수온 양식 수산물 역대 최대 피해 발생(1,430억원)

II.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추진 여건

- (수출입물류) 국제정세 불안, 보호무역 기조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 유지
 - 美 신정부 보편적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'25.下 이후 교역 둔화세 전망
 - 다만, 관세부과 조치 前 밀어내기 물량 등으로 물류 수요 일시 증가 가능
 - EU 연료표준제 시행, IMO 중기조치 채택 등 탄소규제 강화 전망
 - * 다만, 美 신정부의 입장 변화 등으로 탄소규제 도입 시기 둔화 可

⇒ 물류 상황에 따라 긴급 물류지원 또는 해운시장 불확실성 등에 탄력 대응
- (물가수산업) 수산물 물가는 안정세 전망, 수산업 지속가능성 위협
 - '김' 가격 안정세 진입, 대중성 어종·성수품 등 수급상황 양호
 - 다만, 고수온 피해, 기후인플레이션 등 기후 취약성 지속 전망
 - 현재의 복잡한 규제, 오래된 산업 구조로는 기후변화 적응에 한계
 - * 현 상황 지속 시, '2050년 수산물 생산량 약 14% 감소 전망('23년 대비)

⇒ 수급상황 선제적 관리 +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일 구조 개혁 이행
- (연안어촌) 해양관광 등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, 지역소멸 가속화
 - 세계 관광시장 중 해양관광 비중 50%(UNWTO, '23), 생활인구 유입 가능성 高
 - 어촌은 농촌에 비해서도 빠르게 소멸 중이며 고령화율도 심각한 상황
 - * 어가인구 : '18년 12.4 → '23년 9.3만 명(△25.3%) / 어촌 고령화율 : '10년 23.1% → '15년 30.5% → '23년 **47.5%**

⇒ 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 활력 제고 + 어촌 소멸방지를 위한 정주 지원 강화
- (안전환경) 최근 잦은 어선사고로 불안감 증대, 침수 등 연안재해 피해도 지속
 - '24년 대형 해양사고* 급증, 특히 어선 전복·침몰사고 다수 발생
 - * 3명 이상 사망·실종 사고 : ('23) 13명(2건) → ('24) 62명(10건, 전복·침몰)
 - 해수면상승, 해안침식 등으로 연안지역 재해 피해 빈번
 - * 자연재해 피해액의 40.4%가 연안·항만 지역에서 발생('12~'20, 1.5조원)

⇒ 어선 등 취약분야 안전 혁신 + 연안재해 예방 체계 구축

2 추진 방향

정책
비전

민생에 온기를,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

중
점

① 글로벌 선도
해산물류 공급망

- ◆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·물류 인프라 조성
- ◆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 구축
- ◆ 디지털·친환경,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

② 국민·어업인 민생을
뒷받침하는 수산업

- ◆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 안정
- ◆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·가공 체계 구축
- ◆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
- ◆ 세계인이 찾는 K-Seafood 수출 확대

정
책

③ 활력있는 연안·
살고싶은 어촌

- ◆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
- ◆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 육성
- ◆ 정주·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·섬 소멸 대응

과
제

④ 안전하고 깨끗한
바다 환경 조성

- ◆ 해양사고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
- ◆ 해안가 재해·재난 대응역량 강화
- ◆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 조성
- ◆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 구축

⑤ 글로벌 해양
리더십 확보

- ◆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제고
- ◆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①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

□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·물류 인프라 조성

- 세계 최대 거점항만으로 조성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('25.下, 외곽시설)
 - '45년까지 부산항 하역능력을 2배로 확대, 세계 1위 항만으로 조성
 - * (선석수) 5위(40개, '23) → 1위(66개, '45), (길이) 3위(18,843m, '23) → 2위(25,548m, '45)
 - 컨테이너 터미널 간 운영통합('25~) 등을 통한 항만 경쟁력 혁신
 - * 진해신항 1단계 터미널(9선석) 운영사 선정방안 마련('25~'26), 부산항신항 운영사 통합방안 마련('25)
- 해외 물류거점에 우리 기업의 물류를 통합 지원하는 해외물류센터 확대
 - * '25년 美 동부 물류센터 개장('25.8), 동유럽 거점(폴란드 등) 진출방안 검토
 - 민관 합동 'K-물류 TF' 구성, 해외 물류거점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('25.下)

□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 구축

-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대응, 전략적 선박 확충 및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
 - 국내 최초 메탄을 추진 '퀵'선 운항('25, HMM 5척) 등 친환경선박 확충
 - 해운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 마련('25.1분기)
 - * 톤세제 일몰 연장(~'29)에 따른 세제 절감액의 일부를 선박 확충에 재투자
 - 신규 해운 협력체계인 '프리미어+MSC' 출범('25.2~) 안정적 지원 및 美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하여 중남미, 대서양, 인도 등 수송망 확충
- 우리 기업의 수출입물류 지원 지속 및 국적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
 - '25.上 물류 경색 발생시, 선박 부족 노선에 임시선박 투입, 중소기업 물류 지원
 - * 정부 합동 물류 비상대응반 +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통해 일일 모니터링 및 즉시 지원
 - '25년 중반기 이후 해운시장 불확실성 대비,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확충
 - * (기존) 위기대응펀드(1조원) → (확대) (가칭)구조혁신펀드(1조원) + ESG지원펀드(1조원)

□ 디지털·친환경,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

① 첨단·디지털 항만·물류산업 육성

- 스마트항만 국산기술 확보를 위한 **광양항 테스트베드 착공**(‘25.7)
→ 테스트베드를 통해 축적된 기술·경험을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에 활용
* 스마트 항만장비 핵심부품 기술개발 착수(‘25~’28, 총사업비 310억원)
 - 항만 장비·시스템에 인공지능 접목, **AI 항만 조성방안 마련 착수**(‘25, 기획연구)
 -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·UAM 등 **신산업 유치**(‘25), 항만-신산업 시너지 창출
- **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착수**(‘25 예타)를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
* ‘25년까지 부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완료, 민간 선박 활용 실증 추진
 - 자율운항선박법 시행(‘25.1)으로 **중장기로드맵 수립 및 민간실증 특례 지원***
 - * 자율운항선박 실증 시 선박검사 및 설치시설 기준 완화, 승무기준 완화 등 지원
- **선박위치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·AI를 활용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*** 구축
* 통항밀집도 기반 주요 해상교통로, 교통환경정보 등 대국민 제공(‘25.1~)

② 글로벌 탄소규제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

- **선박은 EU 선박연료유 규제***(‘25.1), **IMO 중기조치**(‘27~) 등 **탄소규제에 신속 대응**
* EU 기항선박(5천톤 이상)은 연료유 온실가스집약도 감축목표 설정·이행 의무(위반 시 벌금·운항 제재)
 - **국적선사의 친환경선박 신조 확대***를 위한 **정책금융 지원 강화****
 - * 5천톤 이상 국적 외항선 중 **친환경선박 비중** : (‘24.12) 7.8%(클락슨) → **(‘25) 10% 달성**
 - ** 신조지원 프로그램(36억 달러) 투자요건 완화, 녹색채권 지원범위 확대(외항→내·외항선)
- **항만 탄소제로를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·물류 인프라 전략 수립**(‘25)
 - 항만 내 **친환경연료 저장시설 확충**, **병커링선박 신조 등 공급기반 구축**
* 친환경선박연료 인프라펀드 1·2호 출범(울산 액체터미널, 여수 LNG 터미널)
 - 노후화된 **항만 하역장비를 무탄소 전기동력으로 전환**(‘25~’27, 100대)
- **글로벌 그린쉬핑 강국 도약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확대**
 - 세계 최초 태평양횡단 **韓-美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 수립**(‘25) 및 **덴마크·호주·싱가포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확대**
 - * 국내 해역의 저탄소 선박 운항을 촉진하기 위한 「한국형 녹색해운항로」 시범사업 추진

② 국민·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

□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 안정

- 온·오프라인 할인행사, 정부 비축·민간 수매 등 가용수단 선제적 집행
 - 물가 안정 정착을 위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의 80% 투입
 - 전통시장 환급행사 확대*,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직거래장터 운영(최대 56개)
 - * ('24) 최대 96개 전통시장 → ('25) 최대 12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
 - 정부 비축 대상품목 확대(국산→원양·수입산) 및 공급처 다변화*
 - * 비축 수산물 공급처 : (현재) 대형마트·전통시장 중심 → ('25) 지역 중소형 마트까지 확대
 - 민간 수매 지원을 약 1.5배 가량 확대하여 자발적 수급조절 지원
 - * 민간 수매지원 예산 : ('24) 958억 → ('25) 1,383억(↑44.4%)
- 품목별 수급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확대 및 맞춤형 관리 강화
 - 중점 관리품목(8종) 및 수급 예측품목(3→5종)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
 - '김'은 외해 시험양식(1,000ha),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 전환('25.7~, 계약채배 시범사업)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 확대

□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·가공 체계 구축

- 소비자 접근성이 높고, 위생적인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
 -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 착수('25.上)
 - 저온·친환경 설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위판장* 중심으로 유통구조 효율화
 - * 제주 한림('25~'27), 통영('24~'26) 거점 위판장 조성 중
 - 산지-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설치('25~, 30개소)
 -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 확대(60개→129개, 기존냉동·건어물+ 확대활어 등)
-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영세 수산물 가공시설·업체 집적화·규모화
 - 스마트가공 시설, R&D센터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가공단지 조성 착수*
 - * (전북 군산) 착공('25.3), (경북 영덕) 기본·실시설계('25)
 - 중기부와 협업하여 생산공정 스마트화,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
 - * 5인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영세 수산물 가공업체 집적화 유도(지역 내 20~50개 이상)

□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

-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·자원감소에 탄력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
 - 낚은 규제는 철폐하고, 어획량 중심 관리* 확대('25, 연근해어획량의 60%)
 - *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(국회 계류 중) 신속 제정 지원
 - 자원감소와 경영 악화 등을 고려, 어선감척 규모 확대('25, 425척)
- 양식업은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하고, 심사·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 혁신
 -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확대*, 스마트가두리 보급(2개소)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
 - * 부산('24.3) / 강원('25.上), 전남('25.下), 경북('25.下), 제주(~'26), 신규 1개소 공모('25)
 - 양식면허 연장 시 어장환경평가 등을 실시하는 심사·평가제 시행('25.8)
 - 고수온 등 상습피해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*, 양식장 이전 제도 도입('25)
 - * 상습피해 해역 검토 ^{승인} → 관리해역 지정(3년) ^{평가} → 특별해역 지정 후 2년 이내 폐업
 -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 K-강마을* 기초조사 및 참계 스마트양식장 운영('25~)
 - * 내수면 양식을 생산을 넘어 유통·가공 산업과 레저·관광 등까지 융합된 6차 산업으로 육성
- 청년 등 신규인력의 수산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·인프라 지원
 - 청년·기업이 유희 마을어장을 활용하고, 수익은 어촌계에 환원하는 제도 도입('25.上)
 - 청년 대상 어선('25, 25척) 및 양식장('25, 20개) 임대료 수산업 진출 지원

□ 세계인이 찾는 K-Seafood 수출 확대

- 김 10억불, 참치 6억불, 굴·전복 1억불 등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('25.1분기)
→ '25년 역대 최고 수출액(31.5억불, '22년) 초과 달성 목표
-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, 해외시장 개척 및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
 -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社 대상 수출바우처를 지원하여 집중 육성
 -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(現중화권 → 개편중동·남미), 해외 대형유통망 입점 지원
 - 방한관광객 대상 마케팅 실시(신규), 부처합동 K-박람회 확대(1→3회)
 -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인증 및 수출보험 가입(업체당 최대 6천만원) 지원

3 활력있는 연안 · 살고싶은 어촌 조성

□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

- 해양레저관광진흥법* 시행('25.1~)으로 종합적 해양레저관광 정책 기반 조성
 - * 정부 규제혁신과제로 해수부 -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업 성과
-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 조성, 새로운 레저·관광 콘텐츠로 내수활력 제고
 - 개소당 민간·정부 1조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해양관광거점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착수(2개소 선정, '25.上)
 -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7대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(문체부 협업)
 - 국가해양생태공원*, 등대·갯벌 등 해양자원 활용 이색 관광 신규 추진
 - * (포항 호미반도) 예타(~'25.下), (충남 가로림만·전남 여자만) 예타 신청('25.上)
- 속도감 있는 항만 재개발 추진으로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 조성
 - * 부산항북항 2단계 사업계획 수립('25.下), 인천항내항 1·8부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('25.下)
- 해양 문화·교육 확산으로 우리 바다에 대한 대국민 인식·저변 확대
 - 내륙지역 최초 해양문화시설인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('25.下)
 - 영유아부터 대학교까지 맞춤형 해양교육 프로그램 확대
 - * (예시)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, 약 900차시 이상 해양교육 제공

□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 육성

- 해양플랜트·신소재 등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육성
 -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* 기술개발('25~'28, 350억원) 및 현지 규제 대응 지원을 통해 10조원 규모 동남아 해양플랜트 해체 신시장** 선점
 - * 기존 오일·가스 생산설비를 LNG 공급설비, CCS 등으로 전환
 - ** 인니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1,700개 규모 → 향후 10년 내 9.3조원 시장 형성 전망
 - 국내 개발 친환경선박 신소재(고망간강)의 활용범위 확대*를 통해 3.2조원 규모 해외 로열티 지급 비용 절감
 - * (기존) 화물연료탱크 판재로 승인('24) → (확대) 밸브·플랜지·파이프 등 주물소재까지 확대('25~'29)
 -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개소(서천 '25), 가능성 원료화센터 조성('25, 타당성조사)

□ 정주·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·섬 소멸 대응

①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·제도 확충

- 어촌 경제·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속 추진
 - 既 추진 중인 98개 사업 차질없이 추진, 신규 대상지 26개소 신속 선정('25.2)
- 어촌 민간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혁신
 - 어항 배후 국·공유지 등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어촌발전특구* 신설('25)
 - * 국공유지 장기 임대, 인허가의제 등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패키지 지원
 - 어항구역 내 식당·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('25, 어촌어항법 개정)
- 청년·귀어인 등 대상 일자리, 주거·생활서비스 패키지 지원
 - 어항 인근 유희부지에 청년·귀어 주택단지(개소당 30호)와 임대양식장 등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바다마을 3개소 조성('25~)
 - 관계부처 협업을 주축하여 주택단지-생활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 지속 추진('24년에 이어 '25년에도 어촌 선정 지원)

② 섬 지역 교통·물류 등 생활여건 개선

- 섬 교통 사각지대 해소, 택배비 지원 등 교통·물류 서비스 개선
 - 정기 교통편이 없는 소외도서 지원을 위해 20개 항로 여객운항 지원
 - 섬 택배비 지원대상 확대(현재 322 → 개선 473개) 등 개선을 통해 생활부담 완화
 - * 현재는 연륙 후 10년이 지난 섬(약 151개 도서)을 제외한 322개 도서에 지원 중
 - 섬 주민·여행객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('25, 신규)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
- 지리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섬 지역 원격진료 등 지원
 -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, 보건진료소 및 공중보건소가 없는 의료 사각지대 전체 섬(약 200여개)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('25)
 -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섬·어촌을 찾아가 의료, 생활,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 시범사업 지속 추진

4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

□ 해양사고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

- 어선 전복·침몰 등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혁신대책* 신속 이행
 - * 어선안전 관리대책('24.5 발표) 17개 과제 중 9개 완료, 8개 신속 이행
 -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('25.10~) 및 쏘 어선원 보험 가입 의무화('25)
 - 풍랑경보 예고제 도입('25.下), 어선 안전검사 대상·항목 확대*('25)
 - * 복원성 검사대상(어선길이: 24m → 20m 이상), 바람세기(19m/s) 테스트 적용 확대(40m → 20m 이상)
 -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 중심 현장점검·컨설팅 실시('25)
-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*, 700척 사고취약선박 집중관리 실시
 - * '25년 국고여객선(29척) 대상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 화재 대응장비 보급
- GPS 전파혼신 급증*으로 인한 선박 장애 등 대비, 시스템·인프라 확충
 - * (연도별 현황) ('10) 1척, ('11) 10척, ('12) 254척, ('16) 715척, ('24.12.26) 1,770척
 - 위성항법시스템 중단 시에도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(eLoran) 기술 고도화* 및 수신기 보급**
 - * '27년까지 위치정확도(20→10m), 시각정확도(50→10ns) 등 고도화 서비스 제공
 - ** '25년, 서해접경해역 관공선(어업지도선·해경함정·행정선) 10척 이상에 설치
- 사각지대에 있던 서핑·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 음주단속 처벌 시행('25.6~, 해경)

□ 해안가 재해·재난 대응역량 강화

- 해수면상승, 침식 등에 대응, 통합 재해관리 체계(연안해역+육역* 포괄) 구축
 - * (연안해역) 지적선부터 영해 외측까지 / (연안육역) 지적선부터 육지쪽으로 500~1,000m
 - 연안 개발시 침식·침수 영향 사전검토 의무화('25, 연안관리법 개정)
 - 침수 등 상습 피해 발생 구역은 국가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
 - *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 20개소 추진방안 발표('25.上)
- 수온, 해수면 등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(1~3개월) 정보 통합생산·제공('25.下)

□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 조성

- 해양쓰레기 등 폐기물 예방-수거-처리에 걸친 전주기 관리 강화
 -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추진('25.下 시범사업, 환경부 협업)
 - 로봇 활용 부유쓰레기 수거('25.3~), 방파제·도서* 등 사각지대 수거 확대
 - * ('24) 백령·대청도 방치폐기물 육상 운반·처리 → ('25) 대연평·소연평도까지 확대
-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어구 관리체계 강화
 - 세계 최초로 도입한 어구보증금제('24.1) 지속 확산* 추진
 - * ('24) 통발 어구 → ('25) 자망·부표, 장어통발 시범사업 → ('26) 자망·부표, 장어통발 전면 확대
 - 불법어구 즉시 철거, 유실어구 신고제 등 시행('25, 수산업법 개정)
 - 감척어선(5척) 활용, 불법·폐어구 상시 수거체계 구축
 - * 中 불법 범장망 年 750톤 이상 수거로 약 **240억원**의 수산자원 보호 효과 기대
- 보호구역, 탄소흡수원 확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관리체계 구축
 - 대형 해양보호구역(1천km² 이상) 2개소 신규 지정*('25) 및 후보지 조사('25.上) → '30년까지 전체 해양면적의 30% 해양보호구역 지정 달성 추진
 - * 제주 관탈도 주변('25.1분기, 1천km²), 격렬비열도 주변('25.4분기, 1,600km²)
 - 해양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신규 블루카본 국제인증 추진*
 - * 비식생갯벌, 갯벌 등 신규 등재 여부 결정('25.上, IPCC) → 최종 인증(~'27)

□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 구축

- 해상풍력 입지정보 구축, 적합입지(안) 마련 및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등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
 - *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안(8개, 국회 계류) 신속 제정 지원
-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
 - *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안(국회 계류) 신속 제정 지원
- 공유수면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기반 강화
 - 공유수면 이용현황 정기(매 5년)·수시 조사,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기간이 도과한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관리 강화

5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

□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제고

-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고위급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
 - 아워오션컨퍼런스 제10차 행사(4.28~30, 부산), APEC 해양관계장관 회의(4.30~5.1) 차질없이 개최하여 해양수산분야 대외 신인도 제고
 - 세계 최대 정상급 해양협의체인 UN 해양총회('28)의 국내유치 확정('25.12)을 통해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

⇒ 해양디지털·녹색해운 및 지속가능한 어업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 정책 비전 제시 및 이를 통한 글로벌 해양주도권 확보

- 미·일 등과 정례 협의체* 활용, 국제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 강화
 - * 제4차 한-미 국제어업관리협의회('25.上) / 제2차 한-일 지역수산기구관리협의회('25.上)

- 전자해도, 해양정보 핵심표준을 개발·승인하는 IHO^{국제수요자} 인프라센터 국내 유치('25)
 - * IHO 이사회 승인('24.10) → 센터 설립 준비('25) → 공식 개소('26년)

□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

- 독도 및 관할해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강화
 -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·보전을 위한 제5차 기본계획('26~'30) 수립('25.下)
 - 독도 관련 영상자료 제작, 독도체험관(17개) 등에 배포·활용(교육부 등 협업)
 - 관할해역 주기적·체계적 해양조사 지속 실시(동·서·남해 100회 이상 조사 계획)
- 심해저 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제정 추진('25.下), 해저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·제도 기반 마련*
 - * 해저공간 플랫폼 제작 육상공사 착수('25.6), 해양무인이동체 관리·운영 가이드라인 마련('25.末)
-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('25, 해상설치), 서해 대형부이(2개) 등 조사 인프라 확대
-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및 도서 통계 산정기준 확정('25.下)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



1 국민 민생 지원과 편의를 대폭 확대합니다

수산물 물가부담 완화

- ☑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처 확대
* (현재) 대형마트·전통시장 중심 → ('25) 지역 중소형마트까지 확대
- ☑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확대
* (현재) 최대 96개 전통시장 → ('25) 최대 120개로 확대
- ☑ '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장터' 운영('25.上, 최대 56개 지역)

연안 교통 편의 및 섬주민 지원 확대

- ☑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여객선 길찾기('24.12~) 및 예매('25.2분기) 서비스 개시
- ☑ 여객선 기항지 69개소에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('25)
- ☑ 섬 지역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('24, 100개섬 → '25, 200개 섬)

해양 문화·교육 확산

- ☑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('25.9)
- ☑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('25.下)
- ☑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등학교 해양교육 확대
* ('24) 22개교 대상 총 84차시 제공 → ('25) 34개교 대상 총 900차시 제공

2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강화됩니다

수산인 지원 확대

- ☑ 약 4,000개 소규모어가, 새롭게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('25~)
*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(3천 어가) 및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(9백 어가)
- ☑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3.6조원 규모 지원
- ☑ 어업인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(1일 10만원 → 12만원)
- ☑ 청년 어촌정착지원금(최대 3년 지원) 지원 대상 확대(290명 → 약 355명)

국적 선원 지원 확대

- ☑ 선원 승급·승진에 소요되는 승무경력기간 최대 50% 단축
* 3급 해기사 → 1급 해기사까지 소요 시간 4~9년 → 2~3년으로 단축
- ☑ 경력단절 해기사 승선근무 복귀를 위한 교육비 지원('25, 100명)
- ☑ 오션폴리텍 교육생 생활비 지원(최대 1년, 월 50만원, 140명)
- ☑ 연안선박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
* (기존) 110척 → ('25) 130척(정신·심리 건강상담 신규 제공, 의료키트 소형·경량화)

3 민간투자,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·인프라를 확충합니다



항만 활용도 제고 및 어촌 민간투자 촉진

- ✓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, UAM 등 신산업 기업 입주 허용('25.6~)
- ✓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에
음식점·편의점 등 15개 업종 입주 허용('25.1~)
- ✓ 여항 배후부지에 쇼핑몰·식당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('25.上)



해외인프라 확충

- ✓ 미 동부(뉴저지)에 우리 기업의 물류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개장('25.8)
- ✓ 수산물 해외무역지원센터 지역 다변화
* (현재) 중화권 위주로 분포 → (개선) 중동·남미 등 확대

4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·투자를 강화합니다



어선 안전 강화

- ✓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확대('24, 3톤 이상 어선 → '25, 전체 어선)
- ✓ 소형어선(2인 이하)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('25.10~)
- ✓ 어선 안전검사 대상·항목 확대('25.下)
* 복원성 검사대상(어선길이: 24m → 20m이상), 바람세기(19m/s) 테스트 적용 확대(40m → 20m이상)



여객선 등 안전 강화

- ✓ 국고여객선(29척)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
- ✓ 서해접경해역 관공선 10척에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 보급
- ✓ 여객·위험물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('25.7~, 82개 선사)

민생에 온기를,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

2025 해양수산부 주요업무

01

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

-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·물류 인프라 조성
-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 구축
- 디지털·친환경,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

02

국민·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

-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안정
-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·가공 체계 구축
-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
- 세계인이 찾는 K-Seafood 수출 확대

03

활력있는 연안·살고싶은 어촌

-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 활력 제고
-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 육성
- 정주·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·섬 소멸 대응

04

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

- 해양사고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
- 해안가 재해·재난 대응역량 강화
-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 조성
- 해양공간의 질서 있는 관리체계 구축

05

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

-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제고
-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강화

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

1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·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

☑ 글로벌 거점항만 조성

-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('25.下)
* 하역능력 2배 확대(~'45)
- 컨테이너 터미널 간 운영통합('25~)



☑ 해외 물류센터 확대

- 美 동부 물류센터 개장('25.8)
- 'K-물류 TF' 구성
- 마스터플랜 수립('25.下)



2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

☑ 글로벌 물류망 재편 대응

- 메탄올 추진 선박 운항('25, HMM 5척)
- '프리미어+MSC' 출범('25.2~) 지원
- 중남미, 대서양 등 수송망 확충



☑ 우리기업 및 선사 안정 지원

- 중소기업 수출입물류 지원
- 위기대응펀드 확대 개편(1→2조원)



3 디지털·친환경,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

☑ 항만물류의 첨단·디지털화

- 광양항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 착공('25.7)
- 항만 부지 내 신산업 유치('25)
* 데이터센터, UAM 등
- 완전 자율운항선박 R&D 착수('25 예타)
-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('25.1~)



☑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

- 친환경선박 신조 정책금융 지원 강화
- 항만 탄소중립 인프라 전략 수립('25)
- 노후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(100대, ~'27)
- 한-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 수립('25)



국민·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

1 적극적 수급 관리로 수산물 물가를 잡겠습니다

☑ 선제적 물가 안정 조치

- 상반기 할인행사 집중 지원(전체예산 80%)
- 정부 비축 대상품목 확대 및 공급처 다변화
* 지역 중소형 마트까지 확대('25)



☑ 품목별 수급관리 강화

- 중점 관리품목(8종)·수급 예측품목(3→5종) 확대
- 김 외해양식 생산 및 계약재배(시범) 실시
- 타업종의 김 양식업 전환('25.7~)



2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·가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

☑ 선진 유통인프라 구축

-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신축공사 착수('25.上)
- 온라인도매시장 거래품목 확대
(60→129개)



☑ 고부가 수산식품산업 육성

- 스마트가공단지 조성 착수
- K-Seafood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(중기부 협업)



3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

☑ 기후변화에 탄력 대응

- 어획량 중심 관리 확대('25, 연근해어획량 60%)
- 어선감척 규모 확대('25, 425척)
- 양식업 면허 심사·평가제 시행('25.8)
- 기후변화 복원해역 지정, 양식장 이전 제도 도입('25)

☑ 신규인력 진입 지원

- 청년·기업의 유휴 마을어장 활용제도 도입('25.上)
- 어선(25척) 및 양식장(20개) 임대 확대



4 세계인이 찾는 K-Seafood 수출을 늘리겠습니다

☑ 수산식품 수출 확대

- 품목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('25.1분기)
* 김 10억불, 참치 6억불, 굴·전복 1억불



☑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·지원

- 수출바우처 지원(100개사)
-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(중화권→미주·중동)
- 방한관광객 마케팅 신규 실시
-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(최대 6천만원)



활력있는 연안· 살고싶은 어촌 조성

1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로 연안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

☑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

-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('25.1~)
-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('25.上, 2개소 선정)
- 크루즈 기항지별 테마관광상품 개발(문체부 협업)
-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('25 예타)



☑ 해양문화·교육 확산

- 국립 청주해양고학관 개관('25.下)
- 생애주기별 해양교육 확대



☑ 항만 재개발 신속 추진

-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계획 수립('25.下)
- 인천항 내항 1·8부두 실시계획 수립('25.下)

2 연안경제 도약을 이끄는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

☑ 해양플랜트·신소재 시장

-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기술개발(~'28, 350억원)
→ 10조원 규모 신시장 선점
- 친환경선박 신소재(고망간강) 활용범위 확대
→ 3.2조원 규모 로열티 비용 절감



☑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

- 산업화지원센터 개소(서천, '25.上)
- 기능성 원료화센터 조성(제주, '25, 티당성조사)



3 정주·생활 여건 개선으로 어촌·섬 소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

☑ 어촌 정주여건 개선

- 어촌신활력증진사업('25, 26개소 신규)
- 어촌발전특구 신설('25)
- 청년바다마을 조성('25~, 3개소)



☑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

- 소외도서 항로 지원(20개)
- 섬택배비 지원 확대(322→473개)
- 섬원격의료 서비스 제공('25, 약 200여개)



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

1 해양사고에 대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

어선 안전관리 대책

-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('25.10~)
- 풍랑경보 예고제 도입('25.下)
- 어선 안전검사 대상·항목 확대('25.下)



여객선 등 선박 안전

-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 보급('25, 29척)
- 사고취약선박 집중관리(700척)
-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기술 고도화
- 무동력 수상기구 음주단속 강화('25.6~, 해경)



2 해안가 재해·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

통합 재해관리체계

- 연안 개발시 침식·침수 영향 사전검토 의무화('25)
- 국민안심해안 조성방안 발표('25.上)



기후변화 대응

-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생산·제공('25.下)



3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

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

- 육상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('25.下)
- 로봇 활용 부유쓰레기 수거('25.3~)

해양환경 관리체계

-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('25, 2개소)
- 신규 블루카본 국제인증 추진(~'27)

폐어구 관리 강화

- 어구보증금제 확대('26)
- 불법어구 즉시 철거, 유실어구 신고제 도입
* 수산업법 개정('25)
- 감척어선(5척) 활용 상시 수거



4 해양공간의 질서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

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

-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

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

-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제정

공유수면 이용질서 확립

- 공유수면 이용현황 조사 강화
- 원상회복 이행관리 강화



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

1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



국제행사 성공 개최

-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('25.4, 부산)
- UN 해양총회('28)의 국내유치 확정('25.12)
→ 글로벌 선도 정책비전 제시 + 해양주도권 확보

국제어업관리 파트너십 강화

- 제4차 한-미 국제어업관리협의회('25.上)
- 제2차 한-일 지역수산기구관리협의회('25.上)



국제수로기구(IHO) 인프라센터 국내 유치('25)

2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



독도의 이용·보전·관리

-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5차 기본계획 수립('25.下)
- 독도 관련 영상자료 제작·배포



해양조사 인프라 확대

-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해상설치('25)
- 서해 해양관측부이 추가 설치('25, 2개)



해저 개발·활용

- 심해저활동 지원 위한 국내법 제정 추진('25.下)
-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추진



무인도서 관리

-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('25.下)
- 도서통계산정기준 확정('25.下)